

# 1958년, 위기의 북한과 중국의 선택:

##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의 원인과 배경\*

김택빈\*\*, 김영수\*\*\*

- |                                      |                               |
|--------------------------------------|-------------------------------|
| I. 서론                                | IV. 1958년의 중국: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한계 |
| II. 내정간섭과 갈등?                        | V. 철군을 가능케 한 요인               |
| III. 1958년 당시 안보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내적 역량 | VI. 결론                        |

### 국 문 초 록

북한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부터 북·중간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 까지 약 3년의 북한 안보공백기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던 것일까?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타이완해협 위기로 촉발된 중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과 대약진운동 등 국내 경제 개발을 위한 국력집중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편, 북한이 안보적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둔과 철군 사이에 안보적 효용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북중 간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전쟁을 거치며 발전된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양국 간 신뢰관계는 철군이 갖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 주제어: 북중 관계,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안보 위기, 안보 불균형

\* 이 논문은 제3회 KNDA 학술논문상 제출 원고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원고의 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 박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분단 이후, 북한 주둔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 3월부터 ‘조·중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 7월까지 약 3년 남짓의 북한 안보 공백기는 아직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중국군은 아무런 군사적·제도적 안전장치도 남기지 않고 북한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에는 심각한 안보적 위기상황이 초래되어 있었다. 중국군 철수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균형해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던 것일까? 학계 일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8월 종파사건(1956)과 같은 특정 사건의 영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당시의 포괄적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1958년 철군의 이유는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 도하로부터 시작된 중국군<sup>1)</sup>의 참전은 전쟁의 양상을 전면적으로 뒤바꿔 놓았고, 전멸상태의 북한군을 도와 전쟁을 정전상태로 매듭짓게 만들었다. 그 이후 남한에는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체제 아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흥미롭게도, 정전 후 5년간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중국군은 1958년 3월부터 1958년 말에

1) 현재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국군’이란 명칭을 쓸 것이다. 다만, ‘중국인민지원군’의 명칭을 사용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만 이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이르기까지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전격적이고도 완전한 철수를 감행하게 된다. 이렇게 갑작스런 철군이 더욱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군이 철수한 1958년의 한반도가 정세가 북한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정부는 한국에 육군 661,000명, 해군 27,500명, 공군 16,500명 등 72만 명의 국군을 육성할 수 있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장기주둔을 위해 미 육군 제2사단, 제7사단, 공군 1개 사단 등 6만 명의 병력을 잔류시켰으며, 도쿄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를 1957년 7월에 서울로 옮겨 지속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장삼열 외 2013, 60~70). 특히 이미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 제75차 본회의에서 유엔 측은 정전협정 13조 D항(한반도로의 무기반입 금지조항) 폐기를 선언, “앞으로 남한에 있는 노후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어서 1958년 1월에는 원자탄 탑재가 가능한 어네스트존(Honest John) 전술핵미사일과 280mm 원자포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sup>2)</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분명 북한에게 커다란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은 완전히 철수하

2) 1958년을 전후로 한 미국의 공산진영에 대한 인식, 한국군에 대한 장비현대화와 주한 미군 전력강화, 전술 핵무기 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은 다음의 문서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Document 196; Document 198; Document 199; Document 201; Document 203; Document 205; Document 206; Document 209; Document 210; Document 212; Document 213; Document 214; Document 215; Document 218; Document 219; Document 220; Document 221; Document 222; Document 223", U.S. Efforts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From Korea: The Question of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eapons Into Korea, Volume XXIII, Part 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Korea.*

게 되었고, 한미 연합군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병력 수준에 머물던 북한군이 스스로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하고 비대칭적인 안보상황은 1961년 7월에 북한이 비로소 중국 및 소련과 군사동맹 조약을 맺게 되기까지 지속된다. 그렇다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의 ‘안보공백기’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북한은 심각한 안보불균형과 군사적 위협을 인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중국군 철수에 동의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바로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명료하다. 바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의 심각한 안보공백을 발생시킨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 2. 기존연구 검토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 경향은 지원군 철수의 주된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북한 측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서동만(2005), 와다 하루키(和田春樹)(2002), 박종철(2012), 한상준(2012), 김동길·한상준(2014), 이종석(2014)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한 내정간섭과 그로 인한 북한의 불만에 주목한다. 동시에 1958년 당시 소련의 헝가리사태에 대한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강대국의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추론을 제기한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대립과 불만 그리고 강대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경계심이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철수를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한편, 중국 측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또한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용현

(2006), 이상숙(2009), 셴즈화(沈志華)(2010), 박영실(2012),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2013) 등이 있다. 이들은 내정간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위무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이 철군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1958년 당시 중국의 처해있던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력 집중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에 관해서는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철군을 주장했는지 다양한 사료와 정황증거에 근거하여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하게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한 국가가 안보상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힘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공격적 의도’가 존재해야만 위협적이라고 인식된다(Walt, 1987: 26). 그렇다면 당사자였던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과 공격적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측 내부정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철군이 이루어진 1958년의 중국은 국내 경제적인 어려움, 금문도 사건으로 불리는 타이완 해협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풍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중국군의 철수가 초래하는 안보적 위협을 대단히 큰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 북중 관계의 맥락이나 중국군의 발전된 군사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철군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다음 장에서는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가 이뤄진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북한은 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내정간섭과 갈등?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군 철수를 주도적으로 주장 혹은 용인한 가장 큰 이유로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중·소의 내정간섭을 들고 있다(박종철 2012; 선즈화 2010; 이종석 2014; 한상준·김동길 2014). 주지하다시피, 1956년 조선노동당 8월 전원회의에서 일어난 ‘8월 종파사건’은 1949년 6월 조선노동당 창당 이후 김일성이 구축하고 있던 강력한 일인독재체제에 제동을 건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은 공동대표단을 북한에 직접 파견해 개입하게 되었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출당 조치를 번복하고 윤공흠, 서희, 이필규의 복당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에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은 타당할까? 8월 종파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순 없으며,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8월 종파사건의 처리를 두고 중국과 소련의 강압적인 간섭을 경험하면서부터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정권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한 뒤인 1957년 11월 27일 김일성이 조선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을 살펴보면 그러한 입장은 확실히 나타난다(김일성, 1981a: 381~382).

“사회주의진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형제당들이 당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당들이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위반하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면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 분명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은 김일성에게 상당한 심리적 불쾌감과 정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내정간섭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정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심각한 안보불균형을 낳는 북한 주둔 중국군의 철수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설명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게 있어서 ‘생존’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며,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시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Waltz, 1979: 91~92). 국가가 추구하는 최종 가치는 정치적 독립의 수호와 국토 보존, 즉 ‘생존’이라고 보았을 때 내정간섭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내정간섭에 뒤이은 유화국면은 이러한 설명방식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먼저, 마오쩌둥은 1956년 8월 중파사건 이후 내정간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1957년부터 대대적인 유화공세를 펴기 시작한다. 이는 1954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4년간 8조 위안에 달하는 무상 경제원조, 1957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북경 방문, 1957년 10월 1일 평양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행사에 김일성의 직접 참여, 1957년 11월 모스크

바에서의 북-중 정상회담과 내정간섭에 대한 논의, 1958년 1억 인민페에 해당하는 원조 제공 합의 등을 통해 드러난다.

〈표 1〉 내정간섭에 뒤이은 북한-중국 간 유화국면

시 기	내 용
1954년~1957년	4년간 인민페 8조 위안(구 화폐기준) 무상 경제원조
1957년 1월	그동안 중국이 거부하고 있었던 '1957년 상품무역협정서' 체결하고 대규모 원조제공
1957년 5월 6일	북한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북한정부 대표단 파견 제안, 중국 측 방문 화답
1957년 9월 13일~ 10월 6일	김일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북경 방문
1957년 10월 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행사에 김일성 직접 참가
1958년 11월 21~ 28일, 12월 2일~10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대표단 중국 공식 방문

출처: 박영실(2006)과 김동길·한상준(2014)을 참고하여 재정리.

중국 측의 적극적인 구애와 북한의 호응을 통해 보았을 때, 8월 종파사건을 통해 도출된 내정간섭의 부정적 여파가 장기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이 북-중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고, 철군을 결심할 만큼 심각한 자주권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면 그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개된 양국 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 국면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8월 종파사건 이후 중국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북한



의 내정간섭에 대해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1956년 11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경제건설에 관한 몇가지 방침’이라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연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人民出版社, 1984: 276~277).

“방금 류소기 동지가 한 정치보고에 근거하여 우리가 국제적 사건들에서 찾은 교훈을 우리의 건설사업에 련관시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첫째로, 사회주의나라라 하더라도 쇼빈주의적 오유를 범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범하였다. 마오쩌둥 동지의 분석에 의하면 이 오유란 대외적으로는 대국주의를 실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대민족주의를 실시하며 인민에게는 전제주의를 실시하는 그것이다……”

“례를 들면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형제나라에 대하여 대국주의를 부리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것, 형제민족들에 대하여 아직도 대한족주의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

저우언라이의 연설에 나타나듯, 중국 측은 이미 1956년 말에 이르러, 8월 종파사건과 관련한 자신들의 내정간섭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삼갈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속한 중국의 대응은 앞서 살펴본 1957년에 이르러 재개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무드를 촉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전형적인 중국의 태도로 말미암아 8월 종파사건과 그로 인한 내정간섭의 부정적 여파는 비교적 신속하게 봉합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8월 종파사건과 중소의 내정간섭이 북한 정권의 자주성을 일정부분 침해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의 여파가 양국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신속한 대응과 전향적 태도는 양

국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유화국면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 종파사건과 그로 인한 내정 간섭이 북한 주둔 중국군의 철군 요인으로 직접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 Ⅲ. 1958년 당시 안보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내적 역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정간섭의 영향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철군을 추동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북한에 처해있던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1. 안보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

1958년을 전후로 한 북한의 공식문건을 살펴보면 북한의 안보상황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세 인식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군의 철수가 북한의 주도적 요구로 일어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북한이 처한 상황과 정세인식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먼저 나서서 중국군의 철수를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58년 2월 1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2차 회의에서는 미국의 군비증강과 원자무기 배치에 관한 북한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국토통일원, 1988: 142~143).

“미국 제국주의 침략계층과 그의 추종자들은 군비 경쟁 특히 원자 및 수소 무기분야에서 경쟁을 강화하면서 새 전쟁 준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파산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나토, 바그다드 조약 및 새아토 등 침략적 군사 뿔럭들을 통합하여 그의 성원 국가들의 령토 우에 핵무기를 축적하고 로켓트기지를 설치하는 등 원자전쟁 준비계획을 로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건도 존재한다. 중국군 철군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때와 같은 해인 195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일성, 1968: 220~223).

“리승만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도구로서 60만이상의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인민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더러운 마수를 떼려 하지 않을뿐 아니라 계속 군비를 늘이며 유도무기와 원자무기까지 실어들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58년 철군이 있기 이전인 1956년 말부터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소련 잡지 <메주 두나로드나야 쥐즌> 11월호 발표한 논설, 11월 27일 조선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2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8년 3월 11일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환송대회에서 한 연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전쟁 발발 가능성,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설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데 그 요지를 정리해보면, ‘한반도에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한다. 남한 정권은 북

진을 내세우며 7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군비확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원자무기와 로켓 무기 등을 배치하여 남한을 원자기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은 1957년 9월 이후의 연설부터는 거의 빼놓지 않고 주한미군의 원자무기 배치에 관해 매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 북한의 내적 역량

한편, 북한은 불안정한 외부환경에 대응할 만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이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꼈다면 중국군의 철수를 먼저 요구하거나 쉽사리 철군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북한이 먼저 철군을 요구 했을리 없다는 가설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열세한 군사력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드러내는 김일성의 언급이 존재한다. 이는 가급적 체제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감추려 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체제의 취약성이 솔직히 드러난 흥미로운 부분이다(김일성, 1981b: 93~102).

“가까운 장래에 저우언라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거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이 나가지 않아도 중국인민지원군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나간다 하여 우리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보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중 량국 정부의 회담에 의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은 나갈 수 있으므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사상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사업을 포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적은 력량을 가지고 많은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방어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는 방어공사가 중요합니다. 지난 전쟁에서 미국놈들은 참패하고 떠벌이기를 <<현대적 기술이 뒤떨어진 봉건시대의 기술한테 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어공사를 잘하고 싸워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방어공사를 튼튼히 하면 3대1이 아니라 5대1, 6대1로 적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게 방어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김일성의 진술은 상당히 흥미롭다. 김일성은 남한 군대의 수적 우위를 폄하하면서 중국군이 나가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시하듯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방어공사를 튼튼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한 군사적 우위를 의식하면서도 사상적으로 잘 무장되고 방어공사를 잘하면 충분히 군사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실제 군사력에 기반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현실적 열세 속에서도 최대한 격차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에 가까워 보인다. 두 배가 넘는 남북간의 병력 차이와 주한미군의 막강한 화력, 핵무기 앞에서 정치사상 교양과 방어공사를 잘 한다면 3대1이 아니라 5대1, 6대1의 열세도 능히 만회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과장된 논리는 오히려 북한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조중 량국 정부의 회담에 의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은 나갈 수 있으므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사상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사업을 포치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중국군이 나가더라도 북한 안보에는 아무런 문

제가 없다는 과장된 언급이 나타난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은 아직까지 중국군이 나가는 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나갈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먼저 나서서 중국군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라면 이러한 불확실하고 수동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가 어느 쪽에서 더 큰 동기를 갖고 이뤄진 것인지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원군 철수가 이뤄진 1958년 당시 30만에 불과했던 인민군 숫자는 70만 국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남한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세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군사적 불균형은 인민군 8만명 전역 조치 등 민간 노동력 확보를 위한 북한 정부의 조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남북 간의 병력 격차를 만회해보고자 남한에 지속적으로 병력 감축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비부담과 노동력 부족현상에 관한 딜레마는 1957년 김일성의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김일성, 1981a: 303~310; 김일성 1980: 113; 김일성, 1981a: 280).

“남북사이에 군비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조선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혹은 그이하로 줄이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농촌로력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로력을 따져보면 수자상으로는 모자라지 않지만 농촌로력의 대부분이 녀성들과 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가지 고서는 농사일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농촌로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군군인들을 많이 제대시켜 농촌에 보낼수도 없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건설을 더 하려면 1만 5,000명의 로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로력원천이 없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 로력을 더 준다고 하여도 로력을 더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중국군 철수가 이뤄진 시기의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불균형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사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요컨대, 북한은 병력 열세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에서 중국군이 나가더라도 국가 보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을 하면서도 사상무장과 방어공사를 철저히 하면 몇 배나 되는 적도 무섭지 않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편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북한이 중국군 철수에 결코 주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58년 2월 8일 연설에서 향후 북-중 양국 사이에 철군문제가 논의될 것인데 철군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군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 맞춰 나름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던 북한이 먼저 주동적으로 철군을 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중국 측의 주도적 요구에 따라 철군이 추동되었고 북한은 결국 열악한 안보환경을 수용했어야 함을 시사한다.

## IV. 1958년의 중국: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한계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를 초래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 그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에 있었다.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부터 1958년 철수까지 그 당시 중국이 처해있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중국은 애초부터 한국전쟁에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처음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될 때부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소기의 목적을 최단시간 내에 달성하고 본토로의 귀국을 바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타이완해협의 위기상황은 중국에게는 철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중국의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차원으로 지원군 철수의 핵심 요인을 설명할 것이다.

### 1. 불리한 안보 상황: 타이완해협 위기

북한주둔 중국군의 철수를 추동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할 때, 당시 중국이 처한 안보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즉, 타이완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안보적 필요성이 철군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타이완해협에서의 양안 간 무력충돌은 그 양상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만한 성질의 것이었다.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충돌은 단순히 양안 간 의 무력충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국의 핵심이익이 결



정적으로 충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타이완해협에 즉시 제7함대를 파견했듯이 타이완을 공산주의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했다(조성훈, 2012: 172). 1951년 미 합참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이미 미국은 타이완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타이완이 미국 도서방어선(the off-shore island chain)을 사수하고 자유로운 공군 및 해군 작전활동을 위한 거점으로써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sup>3)</sup>

이렇듯 미국에 의해 자국의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의 타이완해협 위기가 모두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와 시기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제1차 및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와 중국군 철수 시기

구분	철수 시기	철수 병력규모	비고
1954년 공개 철수	9~10월-47군단, 67군단, 33사단	7개 사단 총 87,894명	1차 타이완해협 위기(1954년 9월)
1958년 공개 철수	3월 15일~4월 25일 -16군단, 23군단	6개 사단 총 8만여 명	2차 타이완해협 위기(1958년 8월)
	7월 11일~8월 14일 -21군단, 54군단 및 특별병중부대	6개 사단 및 특별병중부대 총 10만여 명	
	9월 26일~10월 26일 -1군단 및 지원군 사령부와 후방공급부대	3개 사단 및 지원군 사령부와 후방공급부대 총 7만 명	

출처: 胡光正·馬善菡(1987)의 철수현황 부분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Marshall)," United States Policy with Regar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a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Korea and China (in two parts). pp. 1474~1476.

물론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는 한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안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뤄진 철군을 타이완해협 위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초로 공식적인 철군이 이뤄진 시기가 제1차 타이완해협 위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최종적으로 25만여 명에 달하는 가장 많은 규모의 철군이 완료된 1958년에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중국군 철수와 타이완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두 차례의 타이완해협 위기가 전적으로 중국의 주도로 발생한 군사충돌이었다는 점이다.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타이완해협 위기는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전투로 확산됐거나 타이완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도된 선제공격'이었다는 점이다. 포격의 규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듯, 계획된 선제공격을 감행한 중국이 확전의 여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행동했다고 보긴 어렵다.<sup>4)</sup> 생각건대, 미국과 안보동맹이 체결되고, 미 해군 함대의 보호를 받는 타이완에 수개월에 걸쳐 47만 발에 달하는 포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 주둔 중국군의 철군과 확전의 위험을 안은 공격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과 내부적 판단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있다 (동아일보 1958/09/26).

"(동경24일 발 UPI=동양) 북한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소위 중공 인민 「의용군」 부대들은 타이완해협에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4) 중국군은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가 발생한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먼(金門)섬에 약 47만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포탄공격을 가하였다.

고 호언하였다. 중공철수부대의 선발대가 북한괴뢰정권 정당 및 군간부들에게 고별인사를 하였을 때 중공은 전기와 같이 주장하였다. ……

“중공의용군은 북한괴뢰군인과 민간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타이완해방과 극동평화수립을 위해 투쟁하라는 조국의 요청에 보답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말하였다”고 북평방송은 24일 밤에 보도하였다.”

위의 기사에서 드러나듯, 북한 주둔 중국군은 철수 이후 타이완해협으로 이동하여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 당시 타이완과 맞닿은 중국 본토 연안에 약 9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 병력이 집결하였고, 중국 해군력의 약 1/3, 전투기 400여대, 폭격기 90여대가 동원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타이완해협 위기가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를 추동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 2. 피폐한 경제 상황: 막대한 인적·물적 원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실질적으로 한국전쟁 정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40만 이상의 병력을 북한의 지원 없이 주둔시키면서 발생한 장기간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김용현, 2006: 156). 사실 중국이 느끼고 있던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토 위에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세우고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규모 경제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한국전쟁 개입 직전 시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중국이 처해있던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당면과제로 최소한의 군사력만을 유지한 채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경제발전에 총동원하고자 하는 방침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었다. 당 대회에서는 국민경제회복시기의 전략방침으로 ‘사방으로 출격하지 않는 것(不要四面出擊)’을 확정지었다. 이 또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마오쩌둥은 비록 중국이 국공내전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적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출격하면 적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국이 긴장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사방으로 출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7기 3중전회와 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인민해방군의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9~13).

“셋째, ‘생산건설에 참여한다.’ 1949년 12월 5일 중앙군사위는 ‘1950년 군의 생산건설 업무 참여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 지시는 작전과 작전지원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은 생산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 인민해방군은 국방군일뿐만 아니라 생산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 인민과 협력하여 장기간 전쟁으로 피폐된 상황을 극복하여 신민주주의 경제건설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전군에 호소하였다……”

“다섯째, ‘기구를 간소화하고 장병들을 사회에 복원시킨다.’ 1950년 6월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550만 명의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쟁이 종식되고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건

설과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처럼 방대한 군을 유지할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더구나 대규모 군의 유지는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었다. 따라서 타이완과 시장을 해방시키고 반혁명활동을 진압하여 공고한 국방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 대해서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병력을 사회에 복원시키는 일이 요구되었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한국전쟁에 참가하기 직전의 중국은 장기간 내전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회복하고 국가 경제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인민을 지원하고 타이완 해방은 미룬다.’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경제 건설과 타이완해방이라는 중국 국내적인 당면 과제를 잠시 미루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약 8년 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앞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 이후 주둔과정에서의 각종 부담은 당시 중국이 처한 입장에서 쉽게 감내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확실히 한국전쟁 참전과 그 이후의 북한 주둔은 중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참전과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중국의 국방비 총액과 예산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표 3: 연도별 중국국방비 지출 통계, 단위: 억 위안〉

연도	국가재정 총 지출	국방비지출	전체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지출
1950	68.08	28.01	41.14
1952	175.99	57.84	32.87
1954	246.32	58.13	23.60
1956	305.74	61.17	20.11
1958	409.40	50.00	12.21
1960	654.14	58.00	8.87

출처: 李俊亭·楊金河(1992, 693).

위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 중국의 전체 재정대비 국방비 지출액은 1950년 참전 이래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정전 후 지속적인 국방비의 감소추세는 북한 주둔 중국군의 단계적 철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전쟁에의 개입과 그 이후의 군대 주둔이 중국 국가경제에 대단히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 주둔이 중국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존재한다. 동아일보에 실린 1958년 2월 28일자 기사를 살펴보자(동아일보 1958/02/28).

"중공군 북한철수의 이면 대소차관의 실패로 주둔불가능 (동경26일 발 INS=합동) ..... 중공의 마오쩌둥 주석은 작년 11월 아무런 선물도 얻지 못한 채 「모스크바」 방문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그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모주석은 소련정부로부터 거대한 차관을 얻어냄에 실패함으로써 군사비 지출을 부득이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중공의 이와 같은 경제긴축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북한에서 무위도식하고 있는 소위 “중공의용군”이었다. 중공정부는 북한주둔중공군의 유지를 위하여 연간 약2억8천7백만 불에 해당하는 7억 원 이라는 자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이 북한에서 그와 같이 거액의 군사비를 사용할 경제적 여유와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소련으로부터의 차관 지원 불가방침과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중국군 철수를 추동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sup>5)</sup> 요약하건대, 중국은 애초부터 한반도 문제에 장기간 관여할 만한 여건과 의지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선, 안보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전하게 된 한국전쟁에서 최대한 빨리 손을 떼고,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증강에 집중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 V. 철군을 가능케 한 요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철군은 중국의 더 큰 필요성에 의해 추동되었다. 하지만 북한 또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군 주둔과 철수 사이의 안보적 효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철군을 하더라도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국의 능력과 의도가 동시에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철군에 동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북-중 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전된 군사적 능력, 양국 간 굳건한 신뢰

5) 중소관계 악화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음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국전쟁에서 현대화된 미군과 전투를 벌이면 서 중국군은 더 이상 과거의 전술과 장비에 의존해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중국군은 소련군의 편제와 교리, 전술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게 되었고, 특히 군사 지휘관과 정치 지휘관이 동시에 각 단위부대를 지휘 통솔함으로써 말단 부대까지 당에 의해 통제받는 소련식 지휘체계가 중국 군대 내에 정착되게 되었다. 또한 이전시기까지 집단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에 주로 의존하던 전통적인 명령체계가 하나의 통일된 명령체계(unity of command)로 일원화되었다는 점도 변화의 한 모습이 었다(George, 1967: 198). 이와 더불어, 전쟁기간 중 소련이 제공한 다량의 현대 무기와 장비는 중국군을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군대로 변모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것은 현대적 장비와 전술로 무장한 중국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한 이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한반도로 재전개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했다. 특히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능력에 주목하여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6)</sup> 이와 관련하여 미국 무부 정보분석국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장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sup>7)</sup>

“2월 19일 북-중 합동성명에서는 미국 정부와 이승만 정부가 중국군 철수를 재침의 기회로 삼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6) “Document 231: Memorandum From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Parsons)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cy Planning (Smith)”,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Washington, July 11, 1958.

7) “Implication of Communist Chinese Withdrawal From North Korea”, *Intelligence Report No.7687*,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of Research and Analysis for the Far East March 17, 1958,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성명을 통해 중국군은 재침의 위협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성명에서는 반복적으로 중국군 철수가 단순히 압록강 건너의 중국 영토로 군대가 이동하는 것뿐이며, 이는 매우 단시간 내에 한반도에 재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만약 유엔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한반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지닌 바다 건너로 철수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가 북한이나 중국의 안보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될 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 의지도 매우 확고한 상태였다. 확실히, 철군을 결정한 이후에도 중국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한 내정간섭 등 단기적인 부침은 물론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양국관계는 대단히 긴밀한 혈맹관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완전한 철군이 이뤄진 1958년을 전후한 정황을 보더라도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이 즉각 개입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1958년 2월 20일 중국군 총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中国人民志愿军总部關於1958年全部撤出朝鮮的声明)을 발표한다(人民日報 1958/02/20).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장사병은 우리 정부의 건의에 완전히 동의하고 1958년 연말 이전에 단계적으로 전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만약 미 제국주의와 그의 추종자들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존엄을 파괴하고 다시 침략전쟁을 진행하고 그때 북한 인민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중국 인민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파견해 다시 한 번 압록강을 넘어 북한인민군과 함께 적의 침략을 공동으로 분쇄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중국이 유사시 즉각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이후에도 북한군과 중국 만주 지역 그리고 동북방면에 전개된 중국의 군사적 공격 위협은 상존하며,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8)</sup> 이를 미뤄봤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가 갖는 전략적 의미가 그리 크지 않으며 여전히 군사적 위협은 존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1958년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는 북-중간 갈등의 발로가 아니었다. 1953년 정전 직후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철수는 1958년 10월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양국관계의 경색을 가져온 8월 종파사건 시기에는 철군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관계 회복기를 거치며 다시 철군이 재개된 것에서 나타나듯 오히려 철수의 전 과정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철군을 추동한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 북한은 당시의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철군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었으며, 북한은 1958년 당시 한미연합 전력의 군사력 우위와 그에 따른 안보불안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이 중국군 철수 이후 취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8) "Document 27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411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Washington, June 25, 1959.

설명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1960년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과도한 국방비 투자,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로농적위대의 창설, 경제국방 병진노선 추진 등의 대응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익이 훼손된다면 더 이상 자주나 독립의 문제도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을 때, 북한이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정간섭을 이유로 안보상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는 철수를 먼저 주장했으리라 보긴 어렵다.

오히려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보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다.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속하는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군의 북한 주둔은 상당한 인적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국공내전으로 폐쇄해진 국토를 재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예산까지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개입된 한국전쟁은 중국 측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철군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철군과 주둔 사이의 실질적, 전략적 차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즉각적으로 단시간 내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을 함께 겪으며 맺어진 북-중 간의 혈맹적 우호관계는 매우 공고한 성질의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1958년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를 완벽히 설명해내려는 작업은 상당한 한계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의 부재에 기인한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오

고간 공식외교문서나 풍부하고 신빙성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정황증거와 공개된 공식문헌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이후의 북중 관계 변화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문제가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끊임 없는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접수: 3월 31일    ■ 심사: 4월 7일    ■ 채택 : 5월 7일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논문>

- 국토통일원. 1988.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2』. 서울: 국토통일원.
- 김동길·한상준. 2014. “제2의 해방-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여름호.
- 김용현. 2006.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 김일성. 1968. 『김일성저작집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80. 『김일성저작집1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81a. 『김일성저작집1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81b. 『김일성저작집1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동아일보. 1958. “臺灣海峽移動 北韓撤收中共軍公言.” (9월 26일).
- \_\_\_\_\_. 1958. “中共軍北韓撤收의 裏面 對蘇借款의 失敗로 駐屯不可能.” (2월 28일).
-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서울: 선인출판.
- 박종철. 2012.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서울: 선인출판.
- 서동만. 2005.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출판.
- 선즈화. 최만원 역.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출판.
- 와다 하루끼 저. 서동만·남기정 역. 2002. 『북조선』. 서울: 돌베개.
- 이상숙. 2009.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북한의 대 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 이종석. 2014.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 장삼열 외. 2013. 『한미동맹사 60년』.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조성훈. 2012.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서울: 선인출판.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연구부 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2005.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상준. 2012.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의 원인과 중·북 관계.” 『아태연구』. 제19권 2호.
- 히라이와 순지. 2013. 『북한·중국 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선인출판.
- George, Alexander L. 1967. *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lsey.
- 李俊亭 楊金河. 1992. 『中國武裝力量通覽(1949-1989)』. 北京: 人民出版社.
- 人民日報. 1958. "中國人民志願軍總部關於1958年全部撤出朝鮮的聲明." (2월 20일).
- 人民出版社. 1984. 『周恩來 選集(朝鮮文)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 胡光正 馬善菫 編. 1987. 『中國人民志願軍序列』. 北京: 解放軍出版社.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및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and Analysis 자료>

- “Document 196; 198; 199; 200; 201; 203; 205; 206; 209; 210; 212; 213; 214; 215; 218; 219; 220; 221; 222; 223.” U.S. Effort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From Korea: The Question of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eapons Into Korea. Volume XXIII, Part 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Korea.
- “Document 27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411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 “Document 231: Memorandum From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Parsons)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cy Planning (Smith)”,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 “Implications of Communist Chinese Withdrawal from North Korea”, Intelligence Report No. 7687.

**ABSTRACT**

**Crisis of North Korea and Choice of China in 1958:  
The Reasons for Withdrawal of the Chinese Army  
from North Korea**

Kim, Taek-Bin  
(Sogang University)

Kim, Young-Soo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ather very straightforward; why did the Chinese army suddenly decide to leave North Korea thus causing a state of power vacuum in North Korean security affairs.

The consid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lations in the 1958 era shows external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Taiwan Strait, financial burden of the Chinese treasury from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maintenance of troops afterwards, China's efforts to reform the nation into a socialist economy would be more reasonable and plausible reasons for the withdrawal.

The differential factor that has not yet been considered, but is very important, is the strateg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withdrawal. The significance of the withdrawal did not hold much strategic meaning, due to the fact that even with the withdrawal, prompt action under emergency circumstances for the Chinese to come to North Korean aid was already an agreed upon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nations.

**Keywords: D.P.R.K-P.R.C relations, Withdrawal of Chinese army from North Korea, Asymmetry of security**